

GOVP1199814191

338.1851
L293L

농정대화자료

1998. 10

농 립 부

목 차

I. 『국민의 정부』 농정방향과 주요 추진실적	5
1. 『국민의 정부』 농정방향	7
2. 『국민의 정부』 주요 농정추진실적	11
II.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29
1. 외환위기로 기자재 가격은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여 농가경영이 어려워 부채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31
2. 농지재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는 왜 통합해야 하며 공사조직으로 개편하는 이유는?	33
3. 현재 일부 농조조합장 및 노조측에서 자체 구조개혁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가?	35
4.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모든 분야가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9

5. 아직도 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마사회법』을 『경마법』으로 개정하여 마사회는 문화관광부에 존치하되, 경마이익금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마필개량 등의 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41
6. 소값이 최근에 195만원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사육두수가 많고 경기전망이 나빠 추석후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의 소값 전망은? 43
7. 우유가 체화되어 집유제한과 유대지불이 지연되어 낙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47
8.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농산물유통구조 개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49
9. 채소류의 가격이 매년 폭등·폭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 51
10. 외환위기 이후 비료·농약 등 농기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경영애로가 심한데 환율이 상당폭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료와 농약값을 인하하지 않는지? 53
11. 정부는 지난 여름 농림분야의 호우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55

12. WTO체제가 출범한지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이행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57
13. 외국의 장미육종회사가 장미농가에게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중요분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9
14. 쌀시장 개방문제 등 차기 WTO 농산물협상을 위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61
15. 외국기업이 국내 중자업체를 인수함에 따라 독과점에 의한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유전자원 유출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63
16. 지난 정부에서 사업실적도 없는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등 부실법인을 양산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65
17.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직접지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67
18.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15조 농특세사업 투융자 성과와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70
19. 농촌투융자의 주요 재원인 농특세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농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축소하겠다는 것 아닌가? 73
20.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체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산림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시책은 무엇인가? 75

여 백

I. 『국민의 정부』 농정방향과 주요 추진실적

여 백

1. 『국민의 정부』 농정방향

-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이후 구조 개선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어촌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계획과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 투자계획에 따라 경지정리를 비롯한 농업생산 기반과 유통시설 등 농촌인프라가 확충되었음.

- 그러나 단기간내에 집중지원한 투융자사업중 일부가 부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부실화되어 농어촌투융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가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 또한 농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앞으로 농업이 갖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확충하고 가공·유통·품질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경쟁력제고 노력을 강화하면서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확충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우량농지 보전시책 강화와 고품질 다수확품종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
- 경지정리·용수개발·배수로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매매 중심에서 임대차 위주로 전환하고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를 활성화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얼굴있는 쌀”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 정부 중심의 수매제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양곡관리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부합되면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

-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이 외국농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개설, 유통명령제 실시, 전자경매제와 출하예약제 도입 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
 - 농업인이 스스로 기술·경영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진단모델과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등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지원체제 구축
 - 수출전문단지 위주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수출업체와의 계약생산체제를 확립하여 농산물 수출확대 촉진
- 농촌생활환경개선과 농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 농촌휴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산업화하는 동시에 도시·농촌간의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의 산업단지 기반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다양한 2, 3차 산업을 유치
 - 도로·주택용수 등 기초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농촌 마을의 개발지원도 확대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

- 농촌고교졸업생 대학특례입학제를 확대하고 농촌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확충
- 통합의료보험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농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임.

□ 위와 같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官)주도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함께하는 농·소·정(農·消·政) 협력 체제를 정착시켜

-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2. 『국민의 정부』 주요 농정추진실적

가. 농정조직과 제도개혁 작업을 본격 착수

□ 농업인 관련조직을 대폭 정비

-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은 지난 2월 1차 조직개편을 통해 123명을 감축한데 이어 추가적인 조직개편으로 총인력 1,040명(11.7%)을 감축하거나 이체하였음.
 -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담당자를 외부전문가로 공채
- 그동안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 되어 온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1단계로 '99년까지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2단계로 2000.1월까지 통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키로 함.
- 협동조합은 “최소 비용으로 농업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방침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안과 4개 협동조합이 제출한 자체개혁 방안을 기초로 개혁대책을 조속히 확정된 후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할 것임.

- '92년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되어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이라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농림부로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중임.

□ 농업인 이익증진차원에서 농림분야 규제 54% 정비

- 농업분야 총 규제건수 693건중 절반이 넘는 377건 (54.4%)을 농업인 이익증진 차원에서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하였고 이중 92%인 347건은 '98년중에 정비키로 함. 아울러 산림관계 총 276개의 규제중 84건을 폐지하고 125건은 그 내용을 개선키로 하였음.

□ 농촌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혁

-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유통기반시설 등 농업 SOC 성격의 공공사업과 환경농업육성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하고 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1년까지 융자로 전환키로 하였음.
- 현재의 세분화된 개별사업별 자금지원방식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발전 단계에 맞추어 종합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 제도를 '99년에 시범 실시하고 2001년에 전면 도입키로 하였음.

□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하는 『열린농정』 정착

- 그동안 농·소·정 원로회의와 농민·시민단체가 주도 (공동위원장·실무작업단장)한 농정·유통·협동조합개혁 위원회 활동,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51회에 걸친 이동장관실 운영, 5회의 명예장관제 등을 실시하여 농업외분야로부터는 농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고 농업인들로부터는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열린농정』을 정착시킴.

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적극 추진

□ 농가 부담경감조치 및 경영자금 추가 지원

- 농업경영자금의 금리인상을 1.5%로 최소화하였고 농업관련기금의 금리를 동결하였으며, 각종 정책 자금과 농·축협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도 연기한 반면, 농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5,437억원의 부담경감 혜택을 부여하였음.
- 부실경영체는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경영체에게는 경영 및 기술컨설팅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을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중임.

□ 산지 소값안정과 우유수급안정대책 적극 추진

- 중수소와 암소수매를 실시한데 이어 농가의 자가 도축까지 허용하고 군납확대 등 다양한 쇠고기 소비 촉진을 추진한 결과 8월초 148만원선까지 떨어졌던 산지소값이 최근 195만원대로 회복되었음.
-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98.5), 젓소 자율도태, 북한 분유보내기운동 등을 추진하여 분유재고가 '98.5월 16천톤 수준에서 9월에는 12천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다.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하여 주곡자급기반 확충

□ 추곡수매가격 5.5% 인상 조치 및 적정수준의 쌀값 계절진폭 실현

- '93년이후 단한차례 4% 인상에 그쳤던 추곡수매가격을 '98년산에 대해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5% 인상하였고, 단경기 적정 계절진폭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미 공매시기와 물량을 조정하여 '97 추수기대비 13.5% 수준까지 쌀값이 상승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였음.

□ 쌀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쌀 생산·가공·유통혁신 추진

- 쌀종합처리장(RPC) 중심으로 쌀 생산·가공·유통을 혁신하기 위해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면적을 '97년 91천ha에서 '98년 120천ha로 확대하고 운영자금 2,7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49개소의 RPC 신규설치와 80개소의 건조·저장시설 건설을 추진중임.

□ 농지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면적 확충

- 우량농지보전을 위해 전용요건을 강화하고 산지·구릉지 활용을 촉진토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농지보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98. 상반기중 공공시설용을 제외한 농지전용면적이 39% 감소하였고 전체 농업진흥지역면적은 400ha 증가하는 등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

□ 김포매립지 전용불허 조치

- 농림부는 당초 농경지 이용목적으로 매립된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하려는 동아건설의 시도에 대해 행정의 기본원칙과 사회정의를 지키고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킨다는 기본방향아래 용도변경 불가라는 당초방침을 고수하였음.

□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로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

- 정부가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의거 남해화학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결렬상태에 있었던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문제를 관련부처 장관과 협의를 통해 10월중에 농협이 인수키로 확정('98.8)하여 비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였음.

□ 농림분야 수해복구 총력지원으로 응급복구 조기 완료

- 7월말부터 8월 중순사이에 전국적인 수해피해를 당하여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침수농작물의 조기 물빼기와 응급복구를 독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농약을 우선 구입·살포토록 하는 등 수해뒤끝 병해충방제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 1차 응급복구비로 1,063억원을 긴급지원 조치하는 등 조기 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지원단가를 높이고 2ha 미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을 모든 농가로 고루 확대하는 등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번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구축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 『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여 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99년도 정부예산안에 소요액을 반영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 영산강 제4단계 간척계획 철회

-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갯벌·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방식의 농업용 대규모 신규간척사업은 중단키로 하고 이미 계획되었던 영산강 4단계 간척계획(매립면적 34천ha)을 철회하였으며 공사중이거나 완공된 간척사업지구도 생태마을, 생태농업 등 친환경적 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확정하였음.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 추진

- 자운영, 호밀,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등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조사료생산 증대, 경관유지, 지력증진, 관광자원화 등의 다목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 등과 대대적인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8 파종용으로 자운영 종자 4,000ha분(125톤)을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음.

□ 『생명의 숲가꾸기』와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을 연계 추진

-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을 위해 실업대책 기금으로부터 548억원을 확보하여 숲을 살리고 간벌재를 수집(11천㎡)하여 축산퇴비화를 위한 톱밥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축산농업에 적극 기여함.
- 이와 더불어 퇴비증산운동과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을 환경부 및 농민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함.

마.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 농산물 직거래 확대

- 농산물 직거래를 대폭 확충하여 2조 5천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약 7,0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였음.
- 직거래에 참여한 생산자 수취가격은 10~20% 증가한 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히려 20~30% 하락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통개혁을 추진하였음.

□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1%P 인하

-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 가락동시장을 포함하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도매시장 위탁상장수수료를 1%P 인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였음. 이로써 서울 가락동시장에서만 연간 175억원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예상됨.

□ 농산물유통구조개혁대책 확정 및 예산 대폭 증액조치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기초로 산지 생산 단계에서의 수급조절을 위해 유통협약·유통명령제를 새로 도입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경매제외에 도매상 제도도 가능토록 자율화하는 등 농산물 유통 개혁대책을 확정하였음.
- 농산물 개혁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목표아래 '99년 농산물유통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반영하였음(전년대비 76% 증가한 5,456억원)

□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실효성 강화

-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실시중인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192명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9.1일 발대식을 가졌음.

바.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조정 적극 추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국내 부존자원 활용 증대

- 조사료와 국내사료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부존사료를 많이 활용하는 농가와 시·군에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00억원을 금년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남은 음식물 사료화 생산시설”도 11개소를 설치키로 하고 향후 이를 평가하여 '99년 부터 적극 확대 지원키로 함.

□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도입

- 송아지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생산비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중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98. 7월부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였고, '98년 10월부터 16개 시·군을 추가하여 총 32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일원화 및 위생검사체계 확립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관성있게 관리하여 선진국 위생관리체제를 구축함.
-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계기로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선진국형 낙농제도로의 개편 추진

- '99.1월부터 개정된 낙농진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낙농진흥회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 원유의 집유일원화, 원유검사 공영화 등 각종 실행방침을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청회를 준비중임

□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사료가격인하 적극 유도

- IMF 외환위기발생후 농·축협을 통한 L/C개설 추진과 미국 GSM-102 자금 343백만불을 확보하여 사료 원료구입애로를 타개하였음.
- 아울러, 지난 4월이후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배합 사료가격 인하를 독려하여 그간 5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26% 인하하였으며, 현재는 IMF이전에 비해 평균 10%정도 인상된 수준으로 환원시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음.

□ 자금부족을 겪는 축산발전기금에 지원 추진

-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민간기금인 축발기금에 농·축협중앙회로부터 운용 부족자금 2,580억원을 저리에 차입토록 하였고 '99년도에 국고(농특회계)에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개장

- 가축의 도축·가공·유통을 일관 처리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LPC)를 금년 4월 경기 안성에 이어 8월에는 전북 익산에 개장하여 축산물유통비용절감과 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시책 추진

- 선진국형의 가축방역·위생관리체제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탄생시키고 첫번째 사업으로 2001년까지 우리나라를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를 위해 백신예방약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축질병예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제주도부터 돼지관련 전염병 혈청검사를 전면 실시중임.

사. 농산물의 국내 소비부진을 수출확대로 타개

□ 돼지고기, 채소류 등 농가소득작물 수출증가세 지속

- '98.8까지 전체농산물 수출은 6.6%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채소류·화훼류 등 농업인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328백만불로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물량으로는 26%나 늘어났음.

□ 농산물 수출지원체계 대폭 보강

- 장·차관주재의 농산물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출동향점검과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 수출탑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수출농업인과 업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대책상황실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음.
- 장관 : 1월1회, 차관 : 주1회(품목별 대책회의)

□ 수출지원예산 대폭 확대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포장자재비와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98년도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구매·유통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2,328억원외에 1,13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활동강화

- '98.8월말까지 동경박람회 등 국제박람회에 총 9회 참가하여 150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본·미국·캐나다·러시아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특별판매촉진 행사를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7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임.
- 또한 '97년말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어 대캐나다 수출이 중단된 배에 대해 '98.4 캐나다 농업식품부장관 방한시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입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하여 9월부터 배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

아. 차기 WTO 농산물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 농업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농산물협상 대비 사전외교 활동에 장관이 직접 나섬

- '98. 4월 FAO 아·태지역총회에 농림부장관이 수석 대표로 직접 참가하여 우리나라 관심사항을 피력하고 아·태지역 농업협력을 강화하였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호주 1차산업 및 에너지성 장관, 캐나다 농업장관 등 외국의 농업통상 관련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7회)을 통하여 우리 농업(식량)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공조 체제를 구축

- '98.3월 OECD 농업각료회의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료 공동선언문에 반영하였음.
- '98.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입국들과 협력하여 농업분야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조기에 개시하자는 수출국들의 주장을 저지하였으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였음.

- 또한 '98.6월 OECD 한국농업정책 검토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농업의 실상을 알리고 작년말 외환위기 이후 초래된 농업구조개선 추진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음.

□ 차기농산물협상대책단 구성·운영

- 차기농산물협상에서는 과거 UR협상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 효과적인 의견수렴과 협상의제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해 민·관·학 공동으로 차기농산물협상 대책단을 설치하여 운영중임

□ 분기별 쇠고기 협의회에 적극 대응

- 수출국들이 우리나라의 금년도 쇠고기 수입쿼터 이행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수급동향과 보관능력 등을 감안한 수입예로를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
- 특히 9월에 개최된 한·미간 쇠고기협의회는 미국측에서 장소를 워싱턴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 입장대로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 남북한 농업·민간교류를 적극 지원

- 두레마을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1,050ha규모의 두레마을 농장 설립을 위해 신청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옥수수재단이 북한에 적합한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해 1,000ha의 옥수수를 시험재배하는 협력사업을 승인함.

※ '98.1~'98.8까지 농업부문 북한주민접촉 22건, 방북 12건
('97년은 주민접촉만 8건임)

□ 남북농업협력 추진협의회와 북한농업연구센터 구성·운영

- 남북농업협력활성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농업관련 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수립과 민간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통일대비 농업정책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음.

자.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과 경제적·이용가치 증대

□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단주변에 환경조림(1,460ha)과 수원함양 조림(1,140ha)을 실시하였고, 꽃나무 벨트 조성, 호수주변 가꾸기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조림(230ha)을 실시하였음.
- 산림의 희귀·특산·유용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우리꽃 박람회 개최, 비무장 지대 생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자연휴양림(6,619ha), 산림욕장(816ha)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휴양 수요를 충족하면서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음.

□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증대

- 생명의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115천ha에 대한 간벌·가지치기·덩굴제거 등 육림사업을 전개하였고, 지금까지의 목재생산 위주의 침엽수종 조림에서 '98년부터는 황칠, 고로쇠, 음나무 등 유실·특용수 조림을 확대키로 하여 4천ha의 조림을 실시하였음.
- 임산물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물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벌채허가, 목재생산량, 가격정보 등 임산물 유통정보를 D/B화하여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음.

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여 백

문1】 외환위기로 기자재 가격은 상승한 반면, 농산물가격은 하락하여 농가경영이 어려워 부채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IMF 관리체제이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부담경감조치를 시행하였음 (총 5,437억원 상당의 혜택)

- 농업관련 정책자금은 시중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3.5%P를 인상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2%P 해당액 1,790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여 6.5%로 최소화
- 농림부소관 기금('97말 6조 1,619억원)은 시중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를 일체 인상하지 않았음.
- 축산 및 시설원예 분야에 지원한 정책자금 5,752억원에 대해 3~9개월 상환을 연기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도 정상이자만 납부하면 6~12개월 상환을 연기 또는 연체이자를 징수 유예하는 등의 조치
- 또한 저리로 지원되는 농·축산경영자금도 '97년보다 6,500억원이 증가한 4조 4,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 금년 10월이후에는 농가부채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을 강구중임.

- 학계·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 대책의 추진방향은

- '98 하반기부터 '99년간에 상환이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원리금)중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자금을 선별하여 상환을 연기하되

- 부채농가별로 경영의 충실도, 자금유용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옥석을 가려 지원
- 경영회생이 어려운 부실경영체에 대해서는 퇴출 또는 정리

-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대출기관인 협동조합 책임하에 상환연기와 이자율 경감조치를 권유할 예정

□ 근본적으로 농가부채 문제는 농가의 소득증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유통개혁, 종합자금제 실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문2]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
진흥공사는 왜 통합해야 하며 공사조직으로
개편하는 이유는?

-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게 된 배경은
 - 이들 3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어 기능중복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수조합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농조의 경우 역대정권에서 지난 50년 동안 쌓여온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반발에 부딪쳐 좌절되었으며
 - 현행법에서도 소규모 조합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유도했으나 성과가 미흡하고 획기적인 운영개선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만큼 농조 등 개혁조치는 국민의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 '97.6까지 자율적인 통폐합 시한을 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조간 통폐합실적은 1개소(양구+춘천)에 불과

- 3개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련기관을 통합하여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예산절감, 대농업인 서비스제고 등 이점이 있음.
 - 특히, 물관리로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105개)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으로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 군지부(83개)를 통합하면 인력을 연중 지속 활용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신설기관을 공사조직체제로 해야 하는 이유는 농업 기반시설이 주곡의 안정적 생산, 국가지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방지 등 공익적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 현재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조의 경우 조합체제로서는 자립조합과 영세조합간의 재원이동이 불가능하여 조합간 재정의 불균형, 절대다수 조합의 운영부실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임.

문3] 현재 일부 농조조합장 및 노조측에서 자체 구조개혁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가?

- 농조의 자체구조조정안은 일부 조합장과 노조, 대의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나온 급조된 안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없음
- 현행 105개 조합을 37개로 축소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농조의 개혁방안이 제시될 때 마다 조합장들이 합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득권상실에 따른 반발 등으로 이후에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등의 전례에 비추어 신뢰성을 잃고 있음
- 현행 농조법에서도 '97.6월까지 40여개의 설립기준 미달조합을 자율합병토록 하였으나 실제 합병한 실적은 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설령 105개 조합을 37개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조합은 지소형태로 하부조직을 구성하게 되므로 조직축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37개 조합으로의 축소는 그 실현가능성이나 효과가 불투명하며,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일단 피해보려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 분명함

□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화 한다고 하였으나 선거직 조합장의 특성상 조합장 신분유지를 위한 과다경비가 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 이는 결국 어떻게든 조합체제를 유지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농조 자체구조조정안에 따르면

- ① 현재의 자립육성금고 보유적립금 2,800억원
- ② 보상비 3,000억원(600억×5년)
- ③ 고정비용재산매각 2,000억원(400억×5년)
- ④ 예산절감, 적립금, 보조지원 등 1,500억원 및 기타 연합회 예산절감 등 700억원을 포함, 총 1조원의 농조 자립육성금고를 2003년까지 조성하여 재정자립을 이룬다고 하고 있으나

□ 이를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 ① 현보유적립금 2,800억원은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500억원이며 이중 농조의 구조조정안대로 800여명을 퇴직시킬 경우 퇴직급여로 700억원이상 지출되어 실제로 적립가능한 재원은 1,700억원임

② 보상비를 매년 600억원씩 5년간 3,000억원을 적립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년 발생하는 보상비는 각 조합의 운영경비로도 부족하여 현재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도 보상비에 의한 적립은 불가능함

③ 고정불용자산 매각대금으로 매년 400억원씩 5년간 총 2,000억원을 조성하는 방안중 대지 건물 등 400억원은 일부 조합이 통합되더라도 지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각할 재산이 별로 없으며 나머지 불용자산 1,600 억원도 ②번 보상비에 포함되어 중복계산되어 있어 별도 조성재원이 될 수 없음

④ 기타 예산절감, 금고운용수익금, 출연금, 보조지원 등 2,200억원의 경우에도 현재의 조합 재정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음

□ 그외에 현재 농조의 불용재산을 매각하고 1,000억원 수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 퇴직금적립액이 1억원미만인 조합이 80여개에 달하는 등 금고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전혀 없음

□ 특히, 실제로 현행 농조합하에서도 자립육성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96. 6. 관련법 개정후 지금까지 금고에 출연한 자산은 전무한 실정이며

- 일부 자금여유가 있는 자립조합의 경우도 조합원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 농조 자체구조조정안으로 제시된 재정자립방안은 현행 조합체제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와 같이 현행 조합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 농조가 단체의 성격을 조합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받는 대신 조합의 운영을 전적으로 국고보조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조합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문4]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모든 분야가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농업인, 농·축·임·인삼협, 학계대표 등이 참여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함('98.7.31)
 - 주요 내용은 중앙회 조직개편안, 지역조합 합병, 책임경영제 확립, 지도감독강화 등 50개의 개혁과제임.

-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자조 조직임을 감안하여 각 협동조합별로 자체개혁방안과 4개 협동조합의 공동개혁안을 마련토록 함(7.28)
 - 이에 따라 2000년까지 인력감축 17.2%(중앙회 18.5, 회원조합 16.7), 조직축소 1,012개소(중앙회 △121부·소, 회원조합 △891)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별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31일 제출하였음.
 - 중앙회 통합 문제 등을 포함한 공동개혁안은 9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상태임
 - ※ 개혁안 협의조정 및 개혁추진을 위해 『협동조합 개혁기획단』 별도 운영중

- 앞으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건의안과 4개 협동조합이 제출하는 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고 농축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
- 『농업인이 살아야 농업도 살고 협동조합도 산다』는 기본방침하에 『적은 비용과 조직으로 농업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문5] 아직도 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마사회법』을 『경마법』으로 개정하여 마사회는 문화관광부에 존치 하되, 경마이익금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마필개량 등의 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며, 여·야를 포함 각당에서 연말까지 농림부로 환원기로 결정함.
 - 그 후속조치로 각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임.
- 9.10 국무총리께서도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은 여·야 3당간에 합의한 유일한 사안으로 기 합의한대로 '98정기 국회에서 농림부로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와같은 농림부 환원방침에 대해 최근 문화관광위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마사회의 관장부처를 2월화 하여 농림부 환원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려는 것은, 과거에 주관 부서인 농림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것을 개혁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임.

- 농림부로 환원되면, 마필개량·사육에서부터 경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및 제도개혁을 통해 이익금을 증대시켜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납입금을 대폭 늘리고 문화·체육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임.
- 경마산업은 마필개량에서부터 경마운영까지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축산이며, 경주 성적을 다시 마필개량에 활용함으로써 순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양분시킬 수 없음.
- 따라서, 마필육성관리에서부터 경마까지 종합 연계된 경마산업중 육성목장 등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경마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할 경우 지도·감독 부서의 이원화로 마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됨.
 - 일본, 프랑스 등 경마선진국도 경마시행체와 마필생산 주체를 일원화하여 축산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문6] 소값이 최근에 195만원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사육두수가 많고 경기전망이 나빠 추석후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의 소값 전망은?

□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값안정을 위해 '97.1.25일부터 '98.8.31까지 총 5,666억원을 투입하여 212천두의 소를 수매하였고 쇠고기 판매처 확대, 가격인하 지도·단속, 할인판매, 직거래, 농가 자가도축, 군납 확대 등 소비확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98.8월에 전년말대비 12.9% 하락하였고 큰수소 가격은 '98.8.3일 1,487천원을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98.9.23일 현재 1,945천원까지 급등하였으나

		최저가격	9. 8	9.23
· 큰수소	1,487천원(8.3일)		1,991	1,945
· 큰암소	1,556 (7.24일)		1,902	1,908
· 송아지(우)	360 (7.20일)		516	518

□ 그러나 아직도 사육두수가 많고 쇠고기 재고도 과잉인 상태에서,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소비확대 애로 등으로 향후 소값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지소값의 지나친 상승은 곧 쇠고기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되어 소값이 재차 하락할 우려가 매우 큼

※ 소사육두수('98.9) : 263만두(적정 사육두수 200~220만두)

※ 쇠고기 재고량 : 수매육 16,825톤, 17,912톤

- 또한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소값의 과도한 상승은 축산농가의 체질개선을 더디게 하고 사육두수 과잉에 의한 수급불안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지 소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소값이 190만원을 넘어선 9월 3일부터 수매육 방출을 1일 100톤 수준으로 늘려 산지소값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195만원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있음.

□ 앞으로도 소값안정을 위해 소비촉진 확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참고 >

그동안 추진한 소값 안정대책 내용

□ 산지가격 하락에 상응한 소비자가격인하 추진

- 슈퍼, 편의점, 식당에서 식육판매 허용 등 쇠고기 판매처를 대폭 늘려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유도
 - 신고건수(9.19일까지) : 157개소(슈퍼 77, 식당 76, 편의점 4)
- 가격담합행위나 폭리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단속 강화 등을 추진
 - 국세청, 공정위에 1,564개 고가격유지업소 및 21개 가격담합업소 명단 통보(8.7, 9.2)

□ 축협과 한냉 주관으로 할인판촉 행사 개최(8.5~8.15)

- 총 판매두수 : 2,564두(45억원)로 평시의 4~5배 판매

□ 축산물 소비촉진 전국 캠페인 전개 및 직거래 활성화

- 축산물 소비촉진기간(5.26~6.12)을 설정하고 농·소·상·정 연대로 유통협약 체결 및 축산물 브랜드전 개최
- 주말직거래장터, 차량이동판매 등 직거래 사업확대
 - '98.1월~8.31일까지 5,255억원 판매

□ 농가자가도축 허용(7.4)과 도축세 면제

- 농가도축에 따른 위생 및 환경오염 문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을 제정(8.19)

□ 한우수매육 군납물량 확대

- ('97) 280톤 → ('98) 3,600 → ('99) 4,560

□ 번식우 생산지 위주로 시·도별 2개소(16개 시·군)씩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실시(7.16), 10월중 32개 시·군으로 확대

문7] 우유가 체화되어 집유제한과 유대지불이 지연되어 낙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젖소 사육두수 증가로 원유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소비는 부진하여 분유재고가 적정 수준(5~7천톤)을 상회하고 있음.
 - '98 상반기중 원유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 하였으나 우유 소비는 10.9% 감소
 - ※ 젖소 사육두수 : ('96.12) 552 → ('97.12) 544 → ('98.9) 552천두

- 7월부터 저능력우 도태 등으로 원유 생산량은 감소 하고 국산분유 사용확대 등으로 분유재고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과다(9.20현재 12,221톤)
 - 유업체는 자금압박으로 농가 우유대금을 체불하거나 분유로 지급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영난 가중

-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유생산량 감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의 저능력우 도태를 유도하고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TV 공익광고도 추진(10월 방영예정)
 - 또한, 수입분유 사용업체 등에 대해 국산분유의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음

<참고>

우유 수급안정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 젓소 저능력우 도태 : 26,834두(두당 10만원 지원)
- 우유 소비자가격을 5~7%(7.1) 인하하고, 언론매체 홍보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촉진 유도
 - 14개 일간지에 우유 및 쇠고기 소비촉진 광고 게재 (축협, 농림부 직원 모금)
 - 축협,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의 우유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 국방부 우유군납을 금년 '98. 8월부터 주 6회에서 7회로 확대 실시
- 남북한 어린이돕기를 위한 국토도보순례 및 모금운동 전개(8.1~9.6)
- 9.7~9.16일기간 중 축협중앙회와 5개 유업체 공동으로 대대적인 할인판매행사 전개
 - 시중판매가격이 1,350원인 1,000ml 우유를 700~1,000원에 할인 판매
- 우유수급 안정대책과 함께 젓소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7.18일부터 8.31까지 젓소송아지 17,695두를 두당 10만원에 농가의 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였음.

**문8]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농산물유통구조 개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제값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국민의 정부 주요 농정과제로 추진중임.
- 농산물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
예시제를 실시하고 농업관측제도를 강화
- 『농·소·상·정』으로 구성된 생산·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
하여 과잉생산시에 출하량 등을 자율조정하는 유통
협약과 폐기·도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유통조정
명령제 실시
- 산지 유통혁신을 위해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의 공동출하비율을 현 35%에서 60% 수준으로 높혀
나가고 주산지 농협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 포장센터·미곡종합처리장 등의 건설 확대로 농산물
유통량의 30%를 산지에서부터 포장·가공·브랜드화
하여 출하함으로써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제고
-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을 현행 3% 수준에서 2002년 50%
수준으로 높혀 물류비용을 현재보다 30% 절감

- 농민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외에 도매상제 도입
 - 상장경매수수료 인하(1%이상), 하역제도개선, 유통 종사자의 구조조정으로 고비용구조를 타파해 나가며, 전자경매제 도입 및 유사시장의 공영도매시장 흡수 등으로 도매시장 부조리를 근절
 - 2002년까지 18개소의 물류센타를 차질없이 개장토록 하여 기존 5~6단계의 유통경로를 3~4단계로 단축시킴과 아울러 다양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직거래를 정착시켜 직거래비율을 현행 11%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제고
 - 이를 위해 대도시에는 규모화된 직거래장터, 중소도시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민시장을 개설
- 이와 같은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법절차중에 있음.
- 또한, 유통개혁을 앞당기고 그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99년도 유통부문에산으로 '98예산보다 76% 늘어난 5,456억원을 확보하여 유통시설 조기확충, 직거래활성화, 가격안정시책 지원강화 등에 중점 지원토록 할 계획임.

문9] 채소류의 가격이 매년 폭등·폭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

□ 채소류는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도록 적정면적을 재배하고, 생산 및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무·배추·고추 등 주요 채소류 6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재배의향, 종자판매량, 작황 등을 조사하여 파종기전과 출하기에 농업관측월보 등을 통해 농가에 알려주는 농업관측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농가들은 재배면적을 조절하면 나만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농업관측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아 생산조절과 연계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보다 정확한 농업관측으로 농업인의 신뢰도를 높여 실제적인 생산조절에 활용되도록 농업관측 조사 표본수를 확대하고 조사일정을 앞당기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출하기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소수급안정(계약재배) 사업과 정부수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채소수급안정(계약재배) 사업은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주요 채소에 대해 파종기에 농협이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판로를 보장하고, 출하기에는 계약물량의 출하를 신중적으로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음.

	'95	'96	'97	'98(P)
자금조성액(억원)	625	1,100	2,475	2,685
계약실적(천톤)	81	232	247	354

- 고추, 마늘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 무·배추 등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산지수매를 실시하고 산지수매후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 등 시장격리 조치를 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음

문10] 외환위기 이후 비료·농약 등 농기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경영애로가 심한데 환율이 상당폭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료와 농약값을 인하하지 않는지?

- 농약·비료·사료 등 대부분 농자재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농기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98.1월 주요 농기자재 인상을
- 농약 36.1%, 비료 30.1%, 배합사료 36%
- 농약은 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대부분 수입·생산되어 영농기에 공급되므로 하반기 환율 하락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농협과 업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지난 7.6부터 37개 주요품목에 대하여 3.6%를 인하
- 비료는 원자재의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어 지난해 연말 환율급등으로 비료가격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 정부에서는 총 인상요인이 66.3%이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격산정시 '98평균기준환율을 1\$당 1,280원으로 책정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30.1%만 인상되도록 하였음.

※ 정부는 농가의 안정영농을 위해 비료를 실제구매가 보다 싸게 판매하고 그 차액을 재정에서 보전함 ('98 : 1,065억원)

□ 배합사료는 그동안 환율하락과 GSM-102 활용, 업체 의 자구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4월이후 5차례 인하하여 IMF 이전 대비 10.3% 인상된 수준임.

□ 대부분의 농자재가격이 '88년이후 자율화되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으나

- 향후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시 즉시 인하토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임.

문11] 정부는 지난 여름 농림분야의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농업재해지원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 동 지원기준에 의하면 농작물 피해시 2ha이상 농지소유 농가에게는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학자금면제에 관한 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대상 범위를 5ha미만 소유농가까지 확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번 수해피해 농가부터 지원키로 하였음.

또한 유실·매몰된 농경지 복구부담 기준도 개선하였음

- 종전 2ha미만 농지소유농가에게 국고보조를 50% 지원하고 2ha이상 농가에게는 15%만을 지원하던 것을
- 3ha미만 농지소유농가에게 국고보조를 50% 지원하고 3ha이상 농가에게도 국고보조를 30% 지원토록 하였음

<참고>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지원 기준개선 내용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 중·고생 학자금면제 지원 범위확대

구 분	현 재	확 대 (신설)	
	2ha미만	2~3ha미만	3~5ha미만
이재민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2개월
생 계 지 원 (무상양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50%미만 ⇒ 3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50%미만 ⇒ 2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80%미만 ⇒ 6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80%미만 ⇒ 4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80%미만 ⇒ 2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10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6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4가마
중·고등 학생 학자금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50%미만 ⇒ 1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80%미만 ⇒ 1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이상 ⇒ 2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2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이상 ⇒ 1기분

2. 유실매몰 농경지 복구비 부담기준 개선

	현 재	개 선
농경지 복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미만 : 국고 50%, 지방비 10, 용자 30, 자부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ha미만 : 국고 50%, 지방비 10, 용자 30, 자부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ha이상 : 국고 15%, 지방비 5, 용자 60, 자부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ha이상 : 국고 30%, 지방비 10, 용자 50, 자부담 10

문12] WTO체제가 출범한지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 WTO이행특별법에 대해 정부는 법제정 취지를 살려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음.

○ 법조문 총 14개 조항중 8개 조항은 “협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되어 있어 소관부처별로 관세법·양곡관리법 등 56개의 법령을 이미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적음.

※ 목적(제1조), 경제주권 보장(제2조), 민족내부거래인정(제5조) 등의 조항은 정책기조로 준수

□ 다만, 제11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원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한다는 방침하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대통령령)』(’97.2.1)을 제정하였음.

○ ’97년부터 고령농가의 경영이양과 쌀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실시(’98 : 241억원) 중에 있음.

○ '99년부터는 국토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99 예산안 : 57억원)하기로 하고 사업시행방안을 수립중임.

※ '97 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WTO 이행특별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임.

□ 또한, 쌀 수매제도 개편문제와 함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중

문13】 외국의 장미육종회사가 장미농가에게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종묘분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장미는 국내 육성품종이 없어 외국품종을 도입하여 재배하는 실정임
 - 장미와 같은 영양번식 식물은 번식이 용이하고 재배농민이 얼마든지 무단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종회사로부터 로열티 지불을 요구받고 있음.

- WTO체제 및 국제적인 동향은 우수한 품종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품종 육성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임
 - 세계의 선진 각국이 신품종개발자에 대한 보호권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 '98. 5에 종묘법을 개정하여 신품종 육성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켰음

- 로열티 지급시 장미생산농가의 생산비가 증가되어 재배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장미의 경우에 로열티를 주당 1\$씩 지불할 경우, 장미한송이에 생산비 추가부담액은 14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화훼
관련단체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중에 있음

- 관련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장미로열티대책위원회
구성
- 일본 및 독일에 장미로열티 동향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과 동향파악 지시

□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관련연구기관·학계·생산농가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장미 신품종육성 재배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경북 농촌진흥원에서 '93년
이후부터 장미육종에 착수하여 현재 2품종을 개발중에
있으며, '99년도에 농가 실증시험을 거쳐 2001년에
보급할 계획임
- 장미외에 로열티 문제가 예상되는 국화·백합·
카네이션에 대해서도 신품종 육성을 추진중에 있고,
이미 접목선인장과 국화는 각각 5개품종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음

문14】 쌀시장 개방문제 등 차기 WTO 농산물협상을 위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97년부터 회원국들의 논의가 UR협상결과에 대한 이행평가보다는 점차 차기 농산물 협상과제에 중점을 두는 경향임.
 - 농산물 수출국들은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자는 주장을 해왔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등 수입국들이 반대하여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99년도말부터 추진하기로 함.

- 차기 농산물협상은 저율관세물량의 관리방법 개선, 고율관세 인하, 수출보조철폐 및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 이러한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대외적으로 주요국 입장을 파악하여 수입주요국들과 공조하여 대처하고자 함.
 -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협상국들의 관심사항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WTO, OECD, APEC 등 농업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유대를 강화함.
- 한편, 대내적으로는 협상주요쟁점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농림부에 『차기농업협상대책단』을 설치('98.4)하여 운영중임
 -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뉴라운드 협상 대응체제를 활용,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음

문15] 외국기업이 국내 종자업체를 인수함에 따라
독과점에 의한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유전
자원 유출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내 육종기술수준 및 유전자원을 활용, 아시아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업체의 국내 종묘 업체 인수가 활발함.
 - 흥농종묘 및 중앙종묘(세미니스), 서울종묘(노바티스) 등 4개업체 인수 : 국내 매출액 기준 57% 수준

- 최근들어 국내 종자시장은 육묘기술의 발달 등으로 종자 수요량이 감소하고, 해외채종으로 종자생산이 증가하여 국내 종자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종자가격의 급격한 인상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독과점에 의한 인위적인 종자가격 인상시에는 『종자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 실사권을 활용하여 농가에 우량 종자의 생산·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나가겠음.
- M&A에 따라 국내진출 다국적기업도 국내 유전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배추·고추 등에 있어서 유전자원의 유출이 우려되고는 있지만
-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이 유전자원의 유출보다는 이를 이용한 신품종 육종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 우리도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서양채소에 대한 적극적인 품종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재래종 또는 국내 희귀식물의 무분별한 불법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 재래종 유전자, 중간모본 등 유전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가 중점 관리하고
 - 종자산업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종 유전자원의 불법 유출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음.

문16】 지난 정부에서 사업실적도 없는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등 부실법인을 양산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97년말 현재 설립된 농업법인은 5,809개소이며, 이중 운영중 또는 운영준비중에 있는 법인은 4,668개소 (80.3%)이고
 - 나머지 1,141개소는 설립 후 운영실적이 없거나, 운영 중단 또는 개별영농을 하고 있는 법인들로 파악되었음.
 - 이들 법인중 2년연속 적자법인이 57개소(정부지원법인 48개소)에 이르고 정부지원을 받고서도 운영을 중단 하거나(35개소),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22개소)이 있음.

- 정부는 최근 2년간 연속 적자법인은 운영상태를 재조사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법인은 퇴출을 적극 유도하고
 -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만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정부지원을 받고서도 운영중단 또는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지원된 자금도 회수할 것임.

- 앞으로 정부지원만을 바라는 유명 무실한 법인은 자진해산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 정부지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금능력, 운영실적, 조합원의 영농경력, 사업성 검토 등의 사전심사와 함께
 - 5억이상 되는 사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고,
 - 1억이상 사업은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과 신용평가 등을 사전심사토록 할 것임.

문17]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직접
지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농정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 특히, 농약·비료 등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도를
'99년부터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99예산
(안)에 57억원을 반영함.
- 1단계 : 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기존의 유기
및 저투입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99년부터)
- 2단계 :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전환농가에도 확대 적용
(2000년이후)

□ '99년도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대상 농가

< 환경규제지역 >

-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댐 특별지역, 자연공원 지역 전체 경지면적 79,019ha중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5~6천호)중 10% 수준 전망
- 일반적으로 유기농 이행기간이 3~5년임을 감안, 5년단위로 계약 체결

< 기존 친환경농가 >

- 기존의 친환경농가('97 : 9,132호, 7,314ha)에 대해서도 가급적 마을·들판 단위로 구성된 작목반 또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 유도

□ 지원조건 및 방식

-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료·농약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또는 기준이하)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직접지불보조금 지급('99년의 경우 ha당 524천원)
- 모니터링 결과 계약위반시 당해년도 보조금 미지불 및 향후 5년간 프로그램 참여 금지

- 농가간 자율규제를 위해 5년간 영농계획서(비료·농약 감축계획 포함) 작성, 비료·농약대장 비치 및 기장의무, 영농교육 참여의무 부과
 - 시·군, 농검, 지도소의 영농계획서 확인 및 승인
 - 위반시 보조금 지급분에서 10%를 벌칙금으로 부과
- 수확후 환경농업기준을 준수한 작목반 또는 농가에 사후적으로 보조금 지급

□ 대상작목반 농산물·토양 등에 대해 표본추출하여 이행여부를 검사

- 사용참여 대상농가, 작목반 등의 10% 수준을 연 1~2회 표본추출하여 점검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검사소(농약), 농촌지도소(비료)
 - 토양검사 : 년 2회 실시(파종전, 수확후)
 - 생산물검사 : 수확전후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97에 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및 시행규칙』을 금년중에 개정할 예정임.

문18]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15조 농특세 사업 투융자 성과와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 UR협상 및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과 '94년부터 2004년까지 「15조 농특세 사업」 을 추진 하고 있음

○ '92년부터 '97년까지 정부 지원실적은 농특세 4조 8천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조 7천억원임

- 투융자 지원내용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도매 시장건설, 농어촌 도로 포장 등 농촌 SOC성격의 투자와 시험, 연구, 개발 등 정부직접시행사업에 15조 1천억원(48%)이 지원되었고

- 생산자단체인 농·축·임협등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 3조 2천억원(10%)이 지원되었으며

- 농기계, 축사, 온실 등 농업인(영농조합법인 포함)에게 직접지원된 사업비는 13조 4천억원(42%) 수준임 (농업인이 되 갚아야 하는 융자금이 10조 9천억원 이고 순수 보조금이 2조 5천억원)

- 그동안 집중적인 농업투입자에 힘입어 경지정리, 수리시설, 기계화 등 농업생산기반이 확충되고,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가 촉진되는 등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기반이 갖추어지고 있음
 - 농업부문 성장률이 높아지고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향상되고 있음
 - 농업부문 부가가치 성장율 : ('86-'91) : Δ 0.4 \rightarrow ('92-'97) 1.6%
 -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 ('92-'97평균) : 농림업 6.82(산업전체 5.96%)
 - 생산기반의 확충으로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있으며, 규모화된 전업농이 크게 증가
 - 경지정리 : ('92) 614 \rightarrow ('97) 755천ha(경지정리율 67 \rightarrow 83%)
 - 벼농사 기계화율 : ('92)88 \rightarrow ('97) 98%(밭농사 기계화율 : 40 \rightarrow 42%)
 - 쌀 3ha 이상 농가 : ('92) 25 \rightarrow ('97) 35천호(1.4배)
 - 양돈 1천두이상 농가 : ('92) 527 \rightarrow ('97) 1,663호(3.2배)
 - 특히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쌀자급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가경제,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

□ 투융자 성과도 적지 않으나 짧은 기간 다양한 사업에 집중투자 되면서 부실 및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으로 농업분야의 성장을 위한 물적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아직도 미흡함.
- 또한,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능력과 경험이 없는 부적격 대상자가 선정되고, 자금 유용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사례가 발생하였음.

□ 앞으로 농림사업의 투융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 보조의 단계적 감축과 유사사업의 통폐합 추진 등으로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 컨설팅을 기초로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맞게 종합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등 보조제를 시범 실시하고, 포괄보조성격의 지원을 확대
-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농림사업의 부실과 비효율의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

문19] 농촌투융자의 주요 재원인 농특세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농촌에 대한 투자 재원을 축소하겠다는 것 아닌가?

□ 농어촌특별세는 UR타결로 우리 농업이 개방화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94년에 국민합의로 만들어져 농어촌발전에 소중한 투자로 활용되고 있음.

※ 농특세사업 계획 : ('94~2004) 총 15조원

- '94~'98 투융자 실적 : 61,348억원

○ 현재 재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국제통상마찰 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농특세·교육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지금까지 농업분야에는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 생산기반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상태로 투자해야 할 대상이 많아 남아있으며, 대농업인 신뢰유지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당초 계획한대로 2004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음.
- 다만, 세제개편 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특별세의 재원규모가 확보되어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문20]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체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산림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시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자원이지만 임산물 생산액은 1조 1천억원('97)으로 GNP 기여도가 0.3%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낮은 실정임.
 - 이는 지난 30년간 임업육성보다는 치산녹화에 전념해온 산림정책과 산림소유규모의 영세성(2.4ha/인)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제 전체 산림의 녹화가 완료되었고, 임도 등 경영 기반도 구축되어감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주·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기여해 나갈 시기라고 판단됨.
 -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생명의 숲가꾸기 등 대대적 육림사업을 실행하고 밤, 표고, 조경수, 분재 등 소득수종의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

- 아울러 산림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신물질 개발 등으로 임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야생조수 보호구역 확대와 희귀·특산식물 등 자생식물자원도 보전·관리해 나갈 것임.
 - 또한 권역별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산 임산물의 가공·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집성재·보드류 등의 수입대체와 수출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산림이 갖고 있는 환경·휴양기능을 확충하고자 참나무 등 함수기능이 높은 수종조림과 사방댐 설치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강화할 것임.
- 또한, 도시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산촌주민의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경관·도시와의 근접성 등 입지에 맞는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임.